

學生의 大學 운영 參與

金 義 洙

(全北大 哲學科)

1. 들어가는 말

대학은 교수·학생·교직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이 곧 대학교육의 주체인 셈이다.

민주주의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이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후론하겠지만 구성원들간의 상대적 차이와 특수성을 무시한 채 참여의 평균적 동등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원칙적인 논리적 귀결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특히 교수들은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독재 시대에서 민주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모두의 발상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 교수들에게 있어서조차—사실 상당한 정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교수 집단이 일반적인 보수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격동기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변혁 운동을 주도하여 파효적 독재 권력에 의한 암흑기를 종식시킨 학생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모두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운동 세력의 역량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그들이 민족과 사회 문제에서 대학내의 문제로 주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대학 운영의 모든 비공개적·비민주적 내용들은 하루 아침에 폭로될 것이고 대학 자체내에서 또 한 차례의 전면적인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학 비리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경험을 했고 그 과정이 엄청난 희생과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결국 학생들이 중심이 된 헌신적 투쟁의 결과로 비리의 척결과 대학의 민주화를 가장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외의 모든 대학들도 지금 교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내의 민주적 변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국면을 맞게 된다면 교수들은 그만큼 권위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교수들의 진정한 권위는 이미 상당 부분 상실된 지 오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무엇보다도 합리성과 민주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학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들은 대학의 한 주체로서의 자신들의 위상마저 위태로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學生들의 參與는 大學 運營의 公開化를 促進

대학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동안 밀실에서만 행해지던 모든 학내의 운영 내용이 이제 겨우 주체적 참여를 시도하는 교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공개됨을 뜻한다. 그것은 나아가 모든 대학 구성원과 학부모에게 까지 공개됨을 의미한다. 대저 민주주의란 公開의 원칙을 중시한다. 심지어 미국 CIA의 제3 세계 파괴 공작 내용도 그 비밀 보존 기간이 지나면 공개하지 않는가? 소련 공산당의 지도자로 등장하자마자 레이건을 제치고 세계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고르바초프도 개혁 정책을 시도하면서 개방과 공개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공개할 만한 자신이 없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민주적 공개의 원칙이다(CIA의 경우는 공개와 비관 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어서 더욱 문제이기는 하다). 죄도 없는 사람들을 남영동이나 남산 혹은 보안대 등의 고문실에 데려다가 엄청난 사건을 조작해 내는 일처럼 공개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중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나 일 자리를 하나 주면서 돈을 받아먹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 된다. 기성회비를 정보 요원 접대비로 사용하고 채택료를 받아 교수들 술 값으로 나누어 갖는 일 등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암암리에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일들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곧 이러한 공개화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학생 참여가 가져오는 효과는 공개화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교수들은 합리적이고 학생들은 열정만 갖는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합리성이라는 것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관점에서의 논리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5년이나 10년 정도의 역사를 두고 생각해 보면 학생 집단은 합리적이었고 교수 집단은 비합리적이었거나 자기 분열적이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학생들은 독재가 나쁘다고 생각했고 그

래서 거기에 저항했다. 그런데 교수들은 독재에 저항하지 않았다. 필자는 독재에 저항했던 훌륭한 선배 교수들을 무시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해직 교수들은 자기 동료들을 설득하고 주도해서 교수들의 힘으로 독재에 저항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그들은 교수 사회 안에서 소수의 문제아들로 취급되고 말았다. 그들은 오히려 학생운동을 비롯한 재야 운동 세력에 동참함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찾았지, 대학내에서 실질적 주도 세력이 되지는 못했다(따라서 그들을 핑계되며 교수들도 학생들 못지않게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식의 일반론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보다는 이제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통일주의자가 대학의 주도 세력이 되도록 하는 일에 관심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것같이 보이던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보아 오히려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수들이 대부분의 일을 잘할 수 있더라도 학생들이 함께 함으로써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대학 운영이 교수들에게만 공개될 경우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발견하면서도 철저히 문제 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는 다르다. 따라서 學生들의 參與는 대학 운영의 合理化에 적지않은 비중을 갖는다. 이런 말에 혹 교수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자존심은 무모한 것이다. 독재자들 앞에서 그러한 자존심을 주장했더라면 지금쯤 세삼스럽게 자존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운영의 公開化가 꼭 교수들의 기득권과 불합리한 요인에 제동을 거는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과거에 학생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학생들의 데모를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정치 집회가 아닌 체육 대회 등 일반 행사를 할 때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지원금 등을 지출해 온 관행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또 교직원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비합리적인 일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운영의 공개화는 결코 교수들만의 기득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부분에서의 불합리한 기득권을 재조정한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불합리한 일과 근거 없는 기득권의 경우,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재조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곧 '民主化'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불합리와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고 그것을 '경제적 민주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3. 學生의 參與 幅과 內容

학생들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한다면 대학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내용은 거의 제한이 없게 된다. 그것은 대학내에서 학생이 관련되지 않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으로부터 예산·결산 등의 재정 문제, 그리고 특히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일체의 학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교수와 더불어 모든 문제에 관여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물론 학생들의 참여라는 것이 개별적인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民主的 組織을 통한 의견 제시이거나 아니면 學生들이 民主的으로 選任한 代議員을 통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염려될 수 있으나 그것은 곧 해결될 것이며, 또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 오더라도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의 학생회 활동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 보는 교수라면 학생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우는 쉽게 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조직 활동에 많은 경험을 가졌고, M.T.와 L.T. 등의 자체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의 학습과 실천적 결의물을 게울리하지 않고 있으며 선배에서 후배에로의 연결도 효과적으로 잘해 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엽적인 문제에 관한 염려를 구실로 학생 참여를 봉쇄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수들이 지난 1년 반 동안의 대학 민주화 노력에서 얻은 성과인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점차 대학 의회의 성격을 갖

는 교수·학생·교직원의 통합 조직으로 발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교수회·학생회·직원노동회의 협의 기구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경제해야 할 일은 교수·학생·교직원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언제나 똑같은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주의적 민주주의 원칙론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학생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독일에서의 대학 운영에의 학생 참여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 규모가 크고 1960년대에 현대식으로 기획하여 건립한 Bochum 대학교의 경우 총장(1인), 부총장(3인), 사무총장(1인)의 선출과 일체의 학내 입법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의 대학 의회에 각 학부(Abteilung, 모두 17개 학부)별로 교수·강사·학생·교직원이 각 1명씩 참여하되 교육 내용 문제에 관하여는 교수가 표결에서 1인 2표의 권한을 갖고,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1인 3표의 권한을 갖는다. 그외의 모든 경우는 동등한 표결권을 갖는다. 또한 의결권이 없이 자문 역할을 하는 3개의 전문위원회에도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되 기획 및 재정위원회에는 교수:강사:학생:교직원을 4:2:2:2, 연구 분야 전문위원회는 4:2:2(교직원 제외), 교육 내용 전문위원회는 2:2:4(교직원 제외)로 구성하고 있다.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교수, 강사, 학생, 교직원은 모두 대학의 구성원이지만 그 임무가 각각 다르고, 따라서 그 특수성에 따라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과 정도가 다르기 마련이다. 교수들의 연구 활동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그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는 일에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과 학생이 결정에 주도권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되는 일을 학생은 완전 배제한 채 교수들만 결정권을 갖는 것도 합리적이 아니다. 행정 문제에 관하여도 교직원들을 제외한 채 다른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나간다면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 만큼의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식도 아니다. 1987년 여름부터 거세게 일어

났던 전국 대학에서의 교수 자율 기구 구성 운동은 그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각 대학별로 민주적 교수 조직의 형태와 내용이 아주 다양하며 그 명칭들도 상이하다. 오랫동안 일사불란한 행정 체계에 익숙해져 온 우리로서는 교수 조직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도 했고, 특히 교육법의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도 명칭의 통일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소한 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적 교수 조직의 창립 운동이 대학별로 주체적으로 일어났고, 각 대학의 구체적인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조직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획일화된 군사문화가 전 사회를 지배해 온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부터가 중요한 변혁과 저항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대학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내 문제는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일상적이고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독재 시대와 타율 시대의 주된 모순점들을 척결한다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① 민주적 인사를 총장으로 선출하는 문제, ②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등을 정보 기관원 활동비로 지출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구속하게 하는 일을 방지하는 문제, ③ 비영리 교육 사업 기관으로서의 사학 재단들이 학생 등록금을 무절제하게 인상하고 재정의 일부를 오히려 유출해 가는 현상의 시정, ④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 철학과 사회과학의 주요 부분을 교과과정에서 제외시켰던 일의 시정 등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물론 이들 주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앞에서 말한 바 대학 운영의 전반으로 그 관심 영역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을 부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학생들이 무한정하게 요구와 간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교수들이 지금 단호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쏠斗煥정권이나 盧泰愚정권의 논리이다.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는 개

건의 정을 보이던 석방해 주겠다는 식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모아지는 방식으로 운영 방침을 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대학 운영이다. 그러한 합리성의 기준에서 보면 학생들이 지금은 어용 총장의 배격, 재단 횡포의 차단, 정보비 지출의 금지, 학문·사상의 자유 확보 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그러한 화급한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제반 학사 문제에 관하여도 당연한 참여권을 주장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의 순서이다. 교수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당장에 요구하는 문제만을—그것도 가능한한 최소한으로—해결해 주려는 자세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웬만한 문제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없어도 미리 미리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4. 學生 參與에 대해 教授들이 反對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첫째, 시대착오적 권위 의식 때문이다. 요사이도 스승의 권위를 말하려 할 때 君師父一體라는 옛 말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초·중등 교사들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 3권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주는 자와 받는 자, 주입시키는 자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종속적 관계로 이해하려는 교수들이 있다. 교수들이 강의하는 곳에만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을 뿐 자신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영역에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교수들은 생각한다. 대학내의 모든 주요 업무는 교수들이 결정해야지 학생들이 관여하는 것은 질서를 안 지키는 일이며 예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숙성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그르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 같다. 이 모든 일은 학생들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육의 대상으로만 국한시키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현대적 의미의 '교육' 개념에 대한 사실상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년에 다다른 대학생마저도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처럼 취

급하는 습관과도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虛構의 權威意識을 벗어 버려야 한다. 무력과 공권력을 수단으로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려던 독재 권력이 성숙한 민중 의식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오늘의 현실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교수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쭙잖은 권위 의식을 버릴 줄 모른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기득권의 유지가 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30여년간 지탱되어 오는 한국의 군부 독재는 한국 국군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켰다. 정치적 야욕을 가진 극소수의 극우파 군인들이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정권을 탈취한 반란 행위들로부터 시작하여 정권의 유지를 위해 수미일관 무자비한 탄압의 수단을 사용한 것과 특히 도덕적 파탄자임을 증명한 각종 비리 등 군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부 정치 군인들이 수 십만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내에서 군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선한 세력의 저항이 있기보다는 대부분 군사 정권을 옹호하는 편에 섰던 것은 그들이 흔히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나 국가 안보 문제 등의 배후에 깔려 있는 기득권의 유지나 새로운 이권 획득 때문이었다. 육사 출신 장교들이 조기 예편하여 고급 행정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비롯하여 예편 장성들이 국영 기업체의 사장으로 가는 것 등등 군부 독재가 가져다 주는 직업 군인들의 이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직업 군인 중에도 육사 출신, 그것도 대구·경북(TK) 출신 등만 월등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들은 그나마 민간 정부보다는 군사 정부가 자기네에게 유리하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보다는 그 배후에 깔려 있는 이해 관계에 더 의존한다. “교수들은 그렇지 않겠지”라는 일반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수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학생들의 참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교수들은 크든 작든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며, 대학 병원이나 실협·실습비 등의 재정적인 문제에 관련된 교수들일수록 학생들의 참

여에 강한 반발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재정적 이해 관계 말고도 교과과정의 개설이나 변경, 강의 내용의 선정이나 강의 결과에 대한 평가 등 학생들의 학습권에 속하는 내용들도 학생들의 참여 없이 교수들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교수들로서는 편하고 좋기 때문에 기왕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어떤 이들은 “왜 전에는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느냐?”, “그것은 학생들이 데모의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그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역사의 변화에 무감각하고 무지한 사람과 대화하는 일은 지면상 다른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세째, 변화를 두려워 하는 기성 세대 혹은 기득권자들의 보수성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화를 원해 왔다. 왜냐하면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꼈고, 이른바 ‘선진국’ 사람들 보기가 단망할 정도로 유치한 조작과 잔인무도한 폭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민주화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운동을 반대했다. 그들은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사회가 혼란 상태에 빠져 오히려 더 못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릴 것같은 염려 때문이었다. 다수의 교수들은 학생 운동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들의 온건한 의사 표시마저도 반대했다.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학생들을 자극할 것이고 결국 앞서의 염려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우리는 전체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듯싶은 ‘소요 사태’를 경험했고(1987.6), 그 일 덕분에 결국 ‘민주화’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바람직한 명분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온건하고 신중하여 무리한(?) 변혁을 회피하려던 사람들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물론 현재의 상태도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이나마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몸을 움츠리고 자기 보신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희생적으로 참여한 젊은 세대의 진취성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역사적 발전을 위한 평가와 반성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과감한 도전과 항쟁을 계속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관심 영역을 학원으로 옮겨 보면 여기서도 밑바탕으로부터의 변화에는 어려움 없이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민주·반민주 시대에 설치던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큰소리 치고 있다면 과연 오늘의 시대를 새 시대라고 할 수 있는가? 타율과 억압의 시대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무관심주의에 빠져 있던 다수의 교수들이 지금도 적당히 눈치나 살피고 있을 뿐 민주적 질서 확립에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대학이 자율화된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보직을 연구에 지장이 있어서 피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며 봉사하는 자리로 알기보다는 상대적인 출세의 의미로 여기는 가치 기준에 변함이 없고, 교권 회복의 의미에서 '쟁취'해 낸 총장 직선 제도를 지연·학연 등의 1차적 인간 관계에 의한 선거 운동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낡은 형태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교수 사회는 아직도 많은 자체 반성과 밖으로부터의 비판 과정을 필요로 한다.

朝鮮大처럼 문제가 끊어 터지고 거기에 대항한 뚜렷한 민주 세력이 회생적 투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해 낸 학교에서만보다 선명하게 새 질서의 정립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오늘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민주적 개혁 세력보다는 온건하고 보수적인 인사들이 교수협의회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아 구시대와 대동소이한 정도의 변화만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해방 직후에 비금가는 일대 변혁이 요구되며 또 실제로 그러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수들은 아직도 "점진적이며 무리 없는 변화만을 시도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 양식을 갖고 있으니 합리성을 바탕으로 과감한 변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다.

5. 形式的 民主主義 原則論의 限界와 激變期의 民主的 優先順位

존 롤즈의 정의론과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될 때는 일반 지성계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세력에게까지 선진적인 이론으로 관심을 끌어들여 왔으나 지금은 그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롤즈가 주장하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와 하버마스가 설정하는 '억압이 없는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것이 전체 인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도 현실성을 결여한 가설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창출해 내기 위한 투쟁의 과정인데 그 방법론이 세계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미래적이며 부분적인 현실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은 복잡적인 모순 구조를 갖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들의 일반적 의식은 롤즈나 하버마스의 이론 수준은 고사하고 그들에 의해 거부된 형식논리적인 민주주의 원칙론에 머물고 있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선 총장의 후보 문제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회 균등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다수이다. 그런데 실상 총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지는 사람은 비민주 시대에 독재 권력을 내 놓고 비호한 어용적 지식인이거나 역사적 변혁의 현실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출세의 수단으로 총장이 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 혹은 반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인 사학 제단과 밀월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일반 교수들의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앞서 지적된 사람들은 당연히 총장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심적인(?) 교수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 상황 인식이 낭만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기회 균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가 쥐고 있는 격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질서를 회복한 후에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구시대의 주역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리가 끝난 후에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두조건 현재 상태로 산술적 기회 균등 원칙을 주장함은 잘못이다. 제정·인사 문제 등을 불분명하고 불합리하게 처리해 온 사학 재벌의 기존 체계와 인물들을 엄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지 않은 채 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교수나 교직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준다면 그것은 학원을 민주화할 의사가 없음을 뜻할 뿐이다. 우리는盧정권에게 5공화국과의 '단절'을 요구한다. 더 이상 특재의 논리와 방식을 사용하지 말고 민주적인 인사와 정책을 내어 놓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 한 국민들의 질책과 저항은 끊일 수가 없다. 비민주 시대와의 단절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비민주적이었던 사람들은 반성·자숙하게 되고 비합리적인 주장은 물러서게 된다. 아직도 비민주적이며 비합리적인 형태가 판을 치는 대학에서는 민주적 대학 운영을 '이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학내의 민주화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민주화가 된 대학이라면 민주적 의지가 뚜렷한 대학 구성원의 주장이 주도적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교수·학생·교직원들 중에서 소수의 비민주적인 사람들은 발언권을 제한받아야 하고, 민주적인 의지와 양식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대학 민주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 온 다수의 사람들은 입을 열어 자신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해야 한다. 다수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소수의 비리와 횡포를 막아낼 수 있다.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논리가 비민주적이며 구태의연한 논리보다 상대적인 우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제압하여 무력화시켜야 한다. 상대적인 우선 순위는 '민주적인 세력 내부에서만' 정해지는 것이지만 비민주 세력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 세력내에서 합리성의 정도, 문제를 대하는 성실성의 정도 그리고 실천적 의지의 정도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질 뿐이다.

이 모든 것은 각각의 대학마다 그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쟁취되는 것이다.

6. 맺는 말

교수들 중에 아직도 민주화의 대세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연말과 연초에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질서'를 강조한 것 때문에 벌써 민주 운동에 대한 반동이나 역류물에 상하고 몸조심 하고 입조심 하는 교수들은 없을까? 물론 곳곳에 숨어서 바로 그 반동과 역류를 고대하고 있는 구시대의 인사들은 논외로 한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다수이다. 민주화를 바라고 마음으로는나 성원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자신있는 판단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와 속도가 달라진다.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사실 판단을 한 연후에나 자신이 설 자리를 정하려 하는 사람은 영원히 방관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관자들이 많을수록 역사의 진전이 지체되거나 퇴행의 위험성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 교수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확보된 자유의 영역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해야 한다. 두려워서이건 더러워서이건 거의 모든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하기를 피해 온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입을 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은—뒤에서만 말하거나 귀중에만 말하는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역사의 주체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셈이다. 사회를 진단하고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지식인들이 아직도 민족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 자신의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눈치나 살피고 있다면, 문턱에까지 다다른 민주화의 실현을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게 하는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교수들이 확신하고 大學의 民主化와 自律化를 위해서도 합리적 사고와 적극적 참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